

## 1문단

①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②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③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④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 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행정 규제'에 대한 수식된 정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의 속에서 비슷한 말이 쏟아지더라도 명확하게 나누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행정 '규제'예요. '주체', '목적', '규제'가 정확하게 나뉘어 읽혀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려주면 훨씬 더 쉽게 해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해요. 수식된 정의로 제시된 '행정 규제'의 정의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기본 조건까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 ②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 #비교/대조 #예외 인식

그런데 '국회'가 아닌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 즉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행정' 기관이 '입법'하는 것이니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무언가 나뉘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행정 규제'라는 큰 공통점을 바탕으로, '국회의 법률'과 '행정입법'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뉘지는 느낌 말이에요!

혹은 '행정입법'을 '행정 규제'에 대한 '예외'로 처리하며 읽을 수도 있겠네요. '국회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행정입법'은 그 원칙을 거스르는 '예외'니까요. 법 지문의 기본 독해 포

인트를 생각해보면, 이 '행정입법'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③~④ #재진술 #화제 제시

아무튼 이렇게 나뉘진 두 가지 '행정 규제' 중 '행정입법'에 의한 것은 '첨단 기술', '즉각적 대처의 필요성', '개별적 상황 반영'과 같은 이유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보다는 빠른 일처리가 가능한 행정 기관이 다루는 것이 더 낫기에, '행정입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문단을 이렇게 읽으면서 비교 포인트만 이쁘게 잡아주시면,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가 이 지문의 화제임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포인트에 맞춰서 계속 읽어봅시다.

## | 생각 심화 |

'행정 기관'은 왜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므로, '첨단 기술'과 관련된 지식이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 기관'에는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한 것이죠.

똑똑한 학생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이 '국회'로 가서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는 점과 엮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은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여러 당끼리의 의견도 맞춰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의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자문하는 과정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포함된다면? 법안의 처리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행정 기관'은 위의 전문가들을 직접적인 일처리에 포함할 수 있으니, '즉각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행정입법'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푸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회'와 '행정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생각이기도 하죠. 다만 확실한 건, 이 정도의 지식과 생각의 힘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평가원이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능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당연히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어야겠죠?

## 하이라이트 문장

②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행정입법’의 정의를 ‘수식된 정의’로 제시하면서, ‘국회의 법률’과 비교된다는 생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나아가 둘 모두 ‘행정 규제’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공통 범주’까지 잡아주셔야 합니다. 비교/대조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언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네요!

### 2문단 (1)

①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②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④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뉘어진다. 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카테고리 나누기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친절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들 모두 ‘행정입법’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속한 정보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 ②~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그중에서 먼저 ‘위임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러한 ‘입법 작용’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행정입법’은 모두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지요, ‘어떻게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는지’에 주목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겠죠? ‘국회’가 ‘위임’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임/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위임’받아서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겠죠?

#### ④ #비교/대조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제정 주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나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아가 이때 ‘대통령’, ‘총리’, ‘부처의 장’이라는 ‘주

체’들이 ‘위임명령’을 제정한다는 것을 단어의 의미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때는 최대한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각 단어들을 머릿속에 오래 남길 수 있어요.

#### ⑤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줍시다. 우리가 읽고 있는 ‘행정입법’은 이 지문 내에선 결국 ‘행정 규제’라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즉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저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을 ‘입법’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법이 만들어진 뒤에 이를 ‘공포’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국민들이 그 법을 알아야 지킬 것 아니에요!

첫 문단에서 수식된 정의로 제시된 ‘행정 규제’의 정의를 정확히 잡았다면 ‘국민에게 적용’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반복되는 정보니까요! 정의 체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문장이네요.

### 2문단 (2)

⑥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⑦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⑧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⑨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⑩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⑪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 ⑥~⑧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자신의 권한, 즉 ‘입법 권한’을 맡긴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의 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생각 심화’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읽고 옵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면 좋겠네요.

## | 생각 심화 |

우리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표방하는 나라예요. 여기서의 ‘삼권’이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가진 ‘세 개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아요.

행정부 : 대통령이 우두머리가 되며, 법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기관

사법부 : 법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안을 판단하여 적용하는 기관.

입법부 :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 기관 구성, 국정 감시 및 견제 등을 수행하는 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쉽게 설명하면,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그 법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 세 기관의 권력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사법부가 임의로 법을 만들거나 입법부가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거나 낮은 형량이 부과되는 것을 보고 판사를 욕하는 것은 사실 년센스인 거예요. 판사는 ‘사법부’에 속하는 기관인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의로 높은 형량을 주는 법을 ‘입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저 법에 적합한 대로 판결할 뿐이죠.

이 맥락에서,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입법 권한이 없는 ‘행정부’가 입법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문에서는 입법 권한이 있는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자신의 권한을 맡긴 것이므로 ‘행정입법’, 특히 ‘위임명령’이라는 것이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배경지식이 아닌 ‘어휘력’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삼권 분립 원칙’ 정도는 초등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어휘니까요. 평가원에서도 여러분이 이를 안다고 가정하고 출제할 것 같네요.

한편, 이러한 ‘삼권 분립 원칙’과 관련한 원칙 중 하나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지문에서는 ‘행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사법부’에게 요청되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추 해석’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법에 쓰인 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갱신 등을 하지 않아서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해당 조문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에서는 ‘받지 아니한’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기에, ‘받았으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의 운전 또한 금지된다고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법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로 하여금 ‘면허를 받았으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처벌할 수 있

는 법’을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해 되시죠?

이 지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A형에서도 등장한 개념이니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합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식을 알고 있어도, ‘포괄적 위임’과 관련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7번 문장의 ‘그래서’와 8번 문장의 ‘한다는 것이다.’가 보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재진술’의 표지들이니까요. 즉, 6번 문장부터 8번 문장까지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들을 억지로 억어서 이해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재진술의 표지를 바탕으로 억어 있다면, 억지로 ‘같은 말’로 만들어주는 생각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해해봅시다.

‘위임명령’은 국회의 ‘위임’ 덕분에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괄적 위임’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수식된 정의부터 체크해야겠죠? 어떠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즉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그 정의입니다. ‘위임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은 어쨌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근거 법률’이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 ‘범위’를 제시하지 않으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포괄적 위임’은 8번 문장에서의 재진술을 통해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포괄적 위임’은 이러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 법률’이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위임명령’의 주체인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근거 법률’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행정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는 모두 ‘위임명령=삼권 분립 원칙 어기면 안 됨.’이라는 말로 억어 있어요. 즉, 이러한 ‘포괄적 위임’은 ‘삼권 분립 원칙’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근거 법률’이 제정 범위를 정확하게 해 주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행정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잡아낼 수 있겠네요. 이는 ‘삼권 분립 원칙’을 너무나 크게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문장은 ‘위임명령은 삼권 분립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던 겁니다. 재진술의 표지를 바탕으로 억지로 억였더니 너무나 어려웠던 ‘포괄적 위임’을 이해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 ⑨ #재진술 #예외 제시

하지만 이러한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 가능 사항 범위'는 '첨단 기술 관련성'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해요. 첫 문단에서 이야기했듯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보다는 '행정 기관'이 다루기에 더 적합했어요. 따라서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많은 사항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일종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삼권 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첨단 기술' 관련 내용에 한해서는 허용되는 것이니까요.

### ⑩~⑪ #재진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상 같은 말이지만, 법률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어구의 의미를 확대, 축소하면 안 된다고 해요. 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삼권 분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겠죠? 법률의 의미를 왜곡하면 그것은 마치 '행정 기관'이 '입법'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테니까요. '삼권 분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사실상 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삼권 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기에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 하이라이트 문장

⑥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사실상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부터 아래에 나오는 재진술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이었어요. 다음 문장들에 나오는 '그래서', '한다는 것이다.'와 같은 재진술의 표지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합시다.

### 3문단

①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④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 #단어의 의미 살리기

길고 길었던 '위임명령'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행정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카테고리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이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규제'와는 달리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필요도 없고, '입법예고, 공포' 등 위임명령 제정 시 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 그대로 '행정'부 안에서만 사용하는 '규칙'이기에 저런 과정이 필요없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 ③ #화제의 흐름 #예외 제시

그런데 이러한 '행정규칙'이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 규제'와 '예외'를 보자마자 집중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행정규칙'이라는 건 원래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즉 '행정 규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 규제'에 관해 제정될 수도 있다고 해요. 법 지문에서는 '예외'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행정 규제'에 관한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이 '예외'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화제와 직결되면서 '예외'이기도 하다니, 정말 집중해서 읽어주셔야겠습니다.

### ④~⑤ #재진술 #예외 제시

이 '예외적'인 상황은 1)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고, 2)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없는데, 이렇게 '행정 규제'에 적용되려면 법률의 위임이 꼭 필요한 것이네요.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예외적인 상황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해봅시다. 먼저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너무 크면 행정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니, '위임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라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행정입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국회에서 행정입법의 '유형'을 '위임명령' 등으로 지정했다면, 철저하게 그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규칙'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단순히 '주체'만 지정하고 '유형'은 지정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행정규칙'이라는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즉,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행정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지식의 변화는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과인'의 주장에 맞춰서, 이 내용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의 후보'인 '가설'이 하나씩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건데, '과인'에 따르면 '중심부 지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과학적 지식'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낳을 수도 있겠죠. 모든 정보가 '과인의 총체주의'가 가진 정의 속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 하이라이트 문장

⑧ 그리하여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치 새로운 정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었던 문장입니다. 인문 지문은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믿음 속에서, 이러한 '재진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문단

①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②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① #재진술

마지막으로 '총체주의'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로 보이면 안 됩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내용의 재진술이에요. '가설'에 대한 반박이 결정적이라도, 즉 '가설'을 바탕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판단되더라도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박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에서 분명히 본 적이 있던 '실용적 필요'에 대한 내용을 끌고 오도록 합니다. 4문단에서는,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의 '실용적 필요'

가 바로 '가설'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가설'이 아닌 '중심부 지식', 즉 '전체 지식'을 수정하면서 '예측'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이렇게 되면 '가설'은 그대로 둔 채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가능하겠죠?

조금 어렵긴 해도,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원칙에 맞추어 읽어내려간다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간단하고 강력한 태도를 잊지 맙시다.

### ② #재진술

역시 재진술입니다. '비판'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결국 '분석 명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과인'의 주장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 시면 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56%	15%	11%	6%

**170**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②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 ㉡ 과인

- 발문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결국 두 주장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두 주장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예측'을 '경험'을 통해 시험하는 방식으로 '가설'을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 판단해보도록 합니다.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4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맞다고 하겠지?
해설	4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왜 과인이 '개별적 지식의 누적'이 아니라고 했는지 납득했던 기억이 있죠? 이 과정을 잘 거쳤다면, 자연스럽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 하나가 '과학적 지식'이 되는 방식으로 '개별적 누적'된다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4문단의 마지막 문장 이면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물론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요.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2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험’ 중시하는 건 둘 다 똑같았는데?
해설	이 지문은 ‘경험’에 의존하는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글입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든 ‘과인’이든 모두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학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다는 말에는 둘 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경험 의존’) 물론 1문단과 2문단에서 어렵지 않게 근거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이 해설의 과정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 문장,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맞다고 하겠지?
해설	‘과인’은 모든 지식이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지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 있음에 동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 포인트 중 하나였죠. 2번 선지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둘 다 맞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해설	‘예측’이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건 ‘논리실증주의와 포퍼’뿐 아니라 ‘과인’도 동의하겠네요. ‘과인’은 +@ (전체 지식)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가설을 바탕으로 예측을 도출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했으니까요. 공통점이긴 하지만, 발문이 요구하는 대로 ‘아니요’라고 답할 물음이 아니라서 틀린 선지가 되었네요.

| 생각 심화 |

사실 정확한 해설은 ‘예, 아니요’입니다. 즉, ‘과인’은 위의 선지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예요. ‘~로부터’라는 표현은 꽤나 강한 표현이라서, ‘유일한’ 원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에 따르면 이 선지는 ‘가설’만 있어도 예측이 도출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됩니다. ‘과인’은 가설에 전체 지식을 합쳐야 예측이 도출된다고 했으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평가원은 이렇게 논리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엄밀하게 지을 수 있는 선지를 가끔씩 출제하기는 하지만, 절대 답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 선지도 과인이 ‘예’라고 하든 ‘아니요’라고 하든 답 고르는 데는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보셨어도 상관없어요.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 문장,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논리실증주의와 포퍼는 동의하겠지.
해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가지는 ‘과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지식의 구분’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구분했지만, ‘과인’은 그렇지 않았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9%	8%	12%	53%	8%

171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었나? 다시 확인해보니 반대로 써놨네.
해설	같은 팀으로 보였던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나겠지만, 비교/대조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이예요. 돌아가서 확인해보면 반대로 써 놨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 문장, 3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분석 명제인 까닭은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라며.
해설	<p>선지에선 ‘분석 명제’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분석 명제’의 정의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분석 명제는 알다시피 ‘경험과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경험..? 이 생각을 가지고 선지를 조금만 읽어 보니, ‘조사’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한 명 한 명 조사하는 건 ‘경험’에 해당하죠? 경험과 관련된 순간 분석 명제인 이유로는 탈락이 되겠습니다.</p> <p>물론, 분석 명제인 까닭은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었죠?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어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건 체크를 했기에, 답으로 고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p>

- ③ 좌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좌인은 지식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
해설	<p>선지에서 묻고 있는 ‘좌인’의 주장을 생각해 봅시다. 좌인은 지식을 어떻게 구분했었죠? 네 그렇죠.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주장은? ‘분석 명제’라는 건 없고, 지식은 구분되지 않는다! 지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부터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베스트였네요.</p> <p>추가적으로 ‘관찰과 실험’은 경험을 의미한다는 걸 1문단에서도, 우리의 직감에서도, 2번 선지의 ‘조사’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은 포퍼가 말하던 과학적 지식 같은 ‘종합 명제’,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은 포퍼가 말하던 수학적 지식 같은 ‘분석 명제’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는 좌인의 주장과 무관하고, 좌인은 이 둘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으니 틀린 선지입니다. 후자가 조금 더 엄밀한 풀이이죠? 지문을 잘 읽었다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주장이었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주장 체크’였어요!</p>

- ④ 좌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뭐... 그렇다고 했지.
해설	<p>동의적 표현... 필연성... 오 이거 3문단에 나왔던, 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던 ‘순환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못했더라도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었다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3문단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지문에 적힌 말을 그대로 요약한 게 4번 선지네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인 건 알겠어요. 이렇게 평가원이 굳이 우리를 이해시키려 노력하지 않은 정보는, 선지에서도 표면적인 것만 물어봅니다.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그 정보가 왜 나왔는지, 그 ‘역할’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문의 흐름’을 잡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p> <p>물론 ‘생각 심화’의 내용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는 연습을 합시다.</p>

- ⑤ 좌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참/거짓이 바뀌면 안 된다며.
해설	<p>‘동어 반복 명제’의 정의를 묻고 있네요. 역시 3문단의 순환론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쪽 읽으며 ‘동어 반복 명제’라는 말만 찾아보니, ‘동어 반복 명제’는 ‘분석 명제’이고, 이것이 분석 명제인 이유는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동어 반복 명제가 되려면 참 거짓이 바뀌면 안 되는 건 알겠네요.</p>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0%	17%	17%	50%

**172**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 ㉠, ㉡, ㉢를 각각 '가설', '예측', '전체 지식'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이들을 평가하라고 했으니, '총체주의'의 주장들 머릿속에 세팅해놓고 선지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제일 중요한 말이었지.
해설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봐야 해요. 총체주의의 핵심은 가설뿐만 아니라 '전체 지식'까지 모두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체 지식으로부터 나온 예측이 거짓이라고 해도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네요. 기존의 지식, 조건 등 전체 지식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 때문일 수도 있으니깐요.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과 같은 선지네요. 모든 정보가 이 말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었죠?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변부/중심부 지식 전부 수정 가능하다고 했지.
해설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보통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용적 필요'는 바로 '가설 살리기'였죠? 경험과 충돌해 거짓으로 판단된 예측을 만드는 재료였던 가설을 살리고 싶을 때는,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설을 살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③ ㉡는 ㉠과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설 + 전체 지식 = 예측이었지.
해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주장입니다. '예측'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가설' 외에 '전체 지식'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 문장, 4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예측이 거짓이 되려면 경험과 직접 충돌해야지.
해설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건 '경험'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예측'을 만든 '가설+㉡'를 시험하는 것이 '총체주의'의 핵심이니깐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주변부 지식'입니다. 따라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주변부 지식' 쪽에서 '예측'이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선지 유형	4문단 5번 문장,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체 지식 수정하는 방법으로 가설 받아들일 수 있지. 왜 안 돼?
해설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것은 '경험'을 통한 시험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예측'을 이끌어낸 '가설'이나 '전체 지식'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총체주의는 '가설'을 지키기 위한다는 '실용적 필요'가 있으면 '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해설에서만 10번은 넘게 한 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죠?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명시적 근거	8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고전서가 뭔지 찾으러 가야겠다.
해설	‘사고전서’와 같은 책의 내용은 선지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수식된 정의로 제시되었던 내용 그대로죠?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독창적 이론을 주장했지.
해설	‘웅명우, 방이제’는 서양 우주론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주장했어요. 예시로 ‘광학 이론’ 같은 것도 나왔었죠?

- ④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명시적 근거	7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매문정의 주장 그 자체네.
해설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이라는 ‘지적 유산’을 서양 과학의 ‘수학적·경험적’ 방법론과 연결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 되기도 했으니,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 있는 정보였죠?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리학 좋아한 건 웅명우, 방이제인데 이 사람들은 중국 고대 문헌에 비판적이었잖아.
해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웅명우’, ‘방이제’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고대 문헌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의 ‘지적 유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중국 카테고리’의 핵심이었는데, 이들이 ‘중국 고대 문헌’을 부정했다는 건 특이하다는 사실을 지문을 독해하며 인지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5%	19%	22%	30%	14%

**224**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②

[보기]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 출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죠? 해결 과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먼저 <보기>부터 분석해볼까요?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이 ‘구 껍질’ 형태로 모여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A] 부분에서 천체도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피 요소들은 일종의 ‘질점’으로 볼 수 있고, ‘부피×밀도=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천히 이해해봅시다.

-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구 껍질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문에서 읽었던 ‘부분의 합은 전체이다.’를 상기하면, 이 총합은 구 껍질 전체가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이 해당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고 해요. 앞에서 말한 지문의 내용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오네요.

< 구 껍질 전체가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 =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구 껍질의 중심에서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 >

그렇다면 저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 것인지 이해해봅시다. 일단 우리는 지문을 통해 ‘만유인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질량의 곱’과 ‘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껍질 전체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을 가정했으니, P와의 ‘질량의 곱’ 역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것은 ‘중심’입니다. 왜 굳이 ‘중심’에서 당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질량의 곱’이 같다는 건 확인했으니 ‘거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구 껍질 그림(화색 음영 표시된 부분)을 생각해보면, 왼쪽 끝부분의 ‘부피 요소’는 오른쪽 끝부분의 ‘부피 요소’에 비해 P까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즉, P까지의 ‘거리’가 달라졌으니 ‘만유인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구 껍질 전체’가 P와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부피 요소’들의 거리를 고려하는 하나의 중심점, 혹은 평균점을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O’가 되는 것이죠. 모든 부피 요소와의 거리를 상쇄시키는 중심점이 ‘중심 O’이기 때문에,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에서 P를 당기면 구 껍질 전체가 당길 때와 ‘거리’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거리의 기준’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것이죠!

많이 어렵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 거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하나의 명제에서 출발한 생 각이에요.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1)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번엔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해당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가진 질점이 그 구의 ‘중심’에서 당겨야 구 전체의 만유인력(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의 만유인력의 총합)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질량의 곱’도, ‘거리’도 모두 같으니까요.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총정리죠? ‘거리의 기준’이 곧 ‘중심’이라는 정보를 아주 어렵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에서는 ‘구 껍질’과 ‘구 껍질을 구성하는 부피 요소’와의 관계를 설명했고, (2)에서는 ‘구’와 ‘구 껍질’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각각 ‘전체’와 ‘부분의 합’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이 둘을 합하면 ‘구를 이루는 부피 요소들의 합’=‘구’가 되는 것이예요. 이를 (1)과 (2)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 정보들을 이해한 후에 선지 판단을 해 봅시다. 실전에서 풀지 못 해도 돼요. 어차피 시간 없으면 못 푸는 문제니까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깐 천천히 독해하면서 완벽하게 해결해보자는 겁니다.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지름이 커지면 질량도 커지니까 만유인력도 커지겠지.
해설	<p>행성의 ‘밀도’가 균질한데 그 중 하나의 구 껍질의 반지름이 커지면 만유인력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지름’과 ‘만유인력’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렇게 ‘선지에서 묻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했어요!</p>
	<p>하지만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름’과 ‘만유인력’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지에서 묻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지문에 없는 경우에는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른 관계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반지름’은 몰라도 ‘만유인력’은 ‘질점 사이의 질량의 곱’과 ‘질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천천히 판단해봅시다.</p>
	<p>먼저 ‘반지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도 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각 개념이 가진 다른 관계를 생각해봐야겠네요. ‘반지름’은 아예 처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찾을 수 없지만, ‘질량’은 ‘부피×밀도’와 같다는 &lt;보기&gt;의 추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밀도는 균질하다고 했으니, 반지름을 키운다고 밀도가 변하지는 않겠네요.</p> <p>그렇다면 우리는 반지름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지름이 커지면, ‘부피’가 커지겠죠. (이 정도는 평가원이 배경지식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깐요.)</p>

다시, '부피×밀도=질량'이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커지면 질량도 커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지름이 커진다=질량이 커진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네요. 이제 비로소 만유인력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질량의 곱과 만유인력은 '비례'한다고 했으니, 반지름이 클수록 만유인력은 커지겠네요. 늘 강조하지만,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하며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선지에서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필연적인 문제풀이'의 과정에 말이죠!

## FAQ

**Q** 선지에서 묻는 '반지름'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정보인 '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요?

**A**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기>를 독해하면 '거리의 기준은 구의 중심이다.'라는 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크든 작든 구 껍질의 '중심'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달라지지 않기에 '반지름'과 '거리'의 관계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보기> 독해의 과정에서 저 명제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이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지름'이 커지면 태양과 가까운 쪽의 부피 요소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지만, 태양과 먼 쪽의 부피 요소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구의 중심'이라는 포인트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꽤 어려운 생각이지만, 결국 묻고자 한 것은 <보기>를 정확히 독해했는지였습니다.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질량의 곱이 다르잖아?
해설	<p>이번에도 똑같이 해봅시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점과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의 '질량'이 같을 때, 서로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다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서로의 중심에서 당기고 있으니까 '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 '질량의 곱'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일단 지문에서도, 우리의 상식에서도 '태양'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p> <p>그럼 거리는 같은데, '태양의 질량×<math>m</math> &gt; 지구의 질량×<math>m</math>'이므로, 즉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 <math>m</math>인 질점에서 태양을 당기는 경우에 '질점 사이의 질량의 곱'이 더 크므로 '지구 중심 - 태양의 만유인력 &gt;</p>

태양 중심 - 지구의 만유인력'이 되겠네요. 그런데 선지에서는 둘이 같다고 했으니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만유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를 '필연적인 사고과정'을 통해서 써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꾸준히 정독하고 '사고 과정'을 익혀 주세요.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질량의 곱도, 거리도 같으면 만유인력도 같지.
해설	<p>질량이 <math>M</math>인 지구와 질량이 <math>m</math>인 달이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math>M \times m</math>(두 질점 사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와 반비례하겠죠. 나아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거리' 측정의 기준은 '중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잡아두었으니까요. '질량의 곱'도, '거리'도 같다면 '만유인력' 역시 같은 크기일 것입니다.</p>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분의 합은 전체라고 했지.
해설	<p>지문과 &lt;보기&gt;에서 주구장창 말했던 '특정 천체와 작용하는 한 천체의 부피 요소들의 만유인력의 총합=그 천체의 만유인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구와 태양 간의 만유인력은 지구와 태양의 부피 요소들의 만유인력의 합과 같겠죠. 부분의 합은 곧 전체를 의미하니까요!</p>

⑤ 반지름은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질량의 곱도, 거리도 같으면 만유인력도 같지.